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실물경제 치명타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고비를 넘기나 싶던 국내 금융시장이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 우려로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주가는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폭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다시 공황상태에 빠졌다.

국내적으로 극심한 고용 부진과 내수·수출·투자 부진, 건설경기의 침체 등 실물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은 증폭시키고 있다.

글로벌 경기 ‘떡구름’ ... 금융시장 다시 공황상태 고용 악화 ... 수출·투자·내수 ‘트리플 악재’까지 주식 투자자 투매 가세 ... 수입업체 고통을 공포

◇ 금융시장 다시 ‘어두운 터널로’ = 16일 원·달러 환율은 10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인 133.5원이 폭등하며 1,373.0원을 기록했고 코스피지수는 9.44%, 코스닥지수는 9.19% 추락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고강도 처방으로 환율상승이 불가피해졌던 국내 금융시장이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우려 때문이다.

9월 미국 소매판매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인 1.2%

감소하고 뉴욕주의 제조업 활동을 나타내는 엔피어스스테이스 지수가 10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의 엔진인 미국이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외환시장도 주가 폭락의 여파로 혼돈에 빠졌다. 또 금융 위기가 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확산되면서 다시 외화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북한이 이날 남북 관계의 전면 중단을 포함한 중대 결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금융시장에 부



한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경기 둔화와 주택시장의 침체에서 벗어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적으로는 9월 신규 취업자 수가 11만명 대로 떨어지며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수출과 설비 투자, 내수도 둔화하는 등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7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16만 가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아파트 거래는 줄어드는 등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정부가 올해 전망한 4% 대 후반의 경제 성장이 힘든 것은 물론 내년에는 3%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정적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 “실물경제 우려 - 금융불안 지속” = 금융시장이 이번에는 실물경제의 악화 우려에 발목이 잡히면서 주가와 환율이 출렁이는 불안정

삼성경제연구소 장재철 수석연구원은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가 지금부터 나타나는 것 같다”며 “미국 경기와 주택시장 부진이 해소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식투자자, 수입업체 충격. 절망 = 금융시장은 이날 10년전의 환율이 다시 달린 듯한 공포감으로 가득했다.

주식 투자자들은 붕괴되는 건물에서 경황없이 빠져나오는 모습으로 ‘투매’에 나섰다. 투자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더욱 깊게 떨어지는 시세관을 바라보다 눈을 뜨지 못한채 가슴만 졸였다. 금융당국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외환 시장이 무너져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달러 등 외화가 필요한 수입업체, 유학생 등도 환율이 폭등하자 경악했다.

◇ 정부 대책미련 속고 = 정부는 금융시장 전반이 크게 출렁이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에 달러가 말라붙으면 추가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시기와 규모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하게 외환 국간을 열어 달러난 해갈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장기전에 대한 대비태세도 점검 중이다.

특히 실물경제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고용, 물가 등에 걸친 입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한국형 틸팅열차 시연 16일 충남 논산역에 정차된 한국형 틸팅열차 한빛200이 틸팅 시연을 하고 있다. 이날 틸팅열차는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의 시승을 위해 준비됐다. 틸팅열차(Tilting Train Express)는 곡선구간을 주행할 때 원심력을 줄이기 위해 안쪽으로 기울어지도록 설계된 열차로 승차감 개선, 속도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 /연합뉴스

수입차 딜러들 담합 200억원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딜러들의 담합행위에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6일 7개 BMW 판매딜러와 9개 렉서스 판매딜러들이 2004년부터 판매가격의 할인한도와 거래조건을 정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오롱글로벌과 한독모터스, 도이치모터, 바바리안모터스, 동성모터스, 내소남모터스, 그랜드모터스 등 BMW 딜러에게 143억원, 디엔티모터스와 프라임모터, 샌트럴모터스, 천우모터스, 삼양물산, 동일모터스, 남양모터스, 와이엘모터스, 중부모터스 등 렉서스 딜러에게 7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BMW 딜러들은 할인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자 2004년 9월 딜러 대표들로 구성된 딜러협의회를 통해 차종별 가격할인한도, 딜러별 판매지역 및 거래조건 준수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실행했다.

공정위는 BMW 딜러들의 합의기간인 2004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실제 판매된 차량별 평균 할인율은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04년 1~9월의 할인율보다 약 3.7%포인트 낮았다고 전했다.

렉서스 딜러들도 2006년 4월부터 딜러 영업사들이 참석하는 딜러회의를 개최해 가격할인 제한, 거래 조건 설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으며 이에 따라 판매가격 평균 할인율이 약 1.6%포인트 하락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우디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들과 체결한 계약을 통해 자신이 제시하는 차종별 판매가격 리스트에 따라 팔도록 강요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연합뉴스

포스코, 대우조선 인수전 탈락

GS와 컨소시엄 결렬 ... 입찰 자격 상실

GS와의 컨소시엄이 결렬된 포스코가 대우조선 입찰 자격을 상실해 인수전에서 중도 탈락했다.

대우조선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은 16일 발표문을 통해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포스코-GS 컨소시엄의 입찰 제안서를 무효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법무법인 광장의 법률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매각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와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매각추진위가 포스코 단독 입찰을 허용할 경우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산업은행은 전했다.

산업은행은 앞으로 한화컨소시엄과 현대중공업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 작업을 진행해 24일께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휴면 보험금 1조

작년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았거나 보험금 미납으로 자동 실효된 휴면보험금이 1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16일 국회 정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 발생한 보험사 휴면보험금은 1조1천814억원에 달했다.

생명보험사 휴면보험금은 2005년 7천114억원에서 2006년 3천985억원으로 감소한 뒤 작년에 1조720억원으로 급증했다. 손해보험사도 2005년 803억원에서 2006년 664억원으로 줄었다가 작년에 1천94억원으로 재차 증가했다.

은행권 휴면예금은 2005년 1천283억원에서 2006년 1천76억원, 작년 841억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a school with a 50% discount. Text: '같은학교, 학생끼리 통화로 50%할인', '학교끼리 타임 할인제도'. Includes a phone number: 062-512-6210.

“물가, 따라 올리지 마라”

재정부 차관, 환율 상승에 편승 인상 강력 경고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가격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빌미로 편승인상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 추세로 환율상승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단하기 어렵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이 물가안정에 있다”며 “정부는 환율 움직임을 물가에 파급되는 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율효과가 큰 수입농축수산

물과 가공식품, 석유제품, 가전제품 등을 특별점검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품목별 소관부처와 재정부·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현장점검단을 연말까지 운영하면서 가격동향과 환율전가, 유통구조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환율상승 효과를 반영한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이를 반영해 가격인하를 하는지 여부를 소비자에게 등과 함께 감시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복 맵시’ 세계화 한국 세계화 선포식이 열린 16일 오전 서울 aT센터 대회의실에서 모델들이 한복의 맵시를 뽐내고 있다. /연합뉴스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변경 계획 없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무디스 톰 번 국가신용등급 담당 부사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 우려에 대해 “얼마 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고, 현재로서는 변경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무디스는 한국에 대해 신용등급 A2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제임스 올린슨(74) 전 세계은행 총재는 이날 한국이 미국발(發)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고 어느 정도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실업률 통계 착시?

고용시장 ‘쇼크’ 수준 불구 실업률은 안 올라가

취업·실업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늘어난 탓도

경기 하강으로 고용시장이 ‘쇼크’ 수준이지만 통계상 실업률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취업도 실업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나타난 착시여서 현행 공식 실업률이 통계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작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만명대에 머무른 뒤 3~9월에 각각 18만4천명, 19만1천명, 18만1천명, 14만7천명, 15만3천명, 15만9천명, 11만2천명 등 7개월째 20만명을 밑돌고 있다.

특히 9월의 11만2천명은 2005년 2월(8만명) 이후 3년 7개월만에 가장 작았다. 정부 목표치인 20만명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과거 30만~40

만명대에 달하던 것과 비교해봐도 초라한 수치다.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9월 고용률은 59.8%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는 2005년 12월(-0.4%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9월 실업률을 보면 3.0%로 작년 같은 달과 같았다. 지난 5월 이후 실업률은 3.0~3.1%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3.0%라는 실업률은 액면 그대로만 보면 시장경제시스템 하에서 거의 완전고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고용지표와 실업률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현행 실업률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Recruiting Gwangju Network advertisement. Title: '함께 일합시다'. Includes a table with columns: Job Name, Department, Salary/Qualification, Company Name, Start Date, and Contact Info. Contact: 062-JOBKOREA.CO.KR, 062-512-6210.

Advertisement for financial information disclosure. Title: '금융·기업 개인 신용정보 유출편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강화'. Text: '내년부터 금융회사나 기업 등이 상거래 목적으로 얻은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했을 때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회 정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데 따른 것으로,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허용하되 민원 처리와 거래 안전성을 위해 1개 이상의 오프라인 영업점 설치와 비상시 재해복구계획 수립,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사용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예금과 대출 등 은행의 고유 업무를 대부분 허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금산 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원칙 등 현행 소유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회원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카드 대금을 내지 못할 때 대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일부 면제해 주는 서비스(DCDS)를 카드사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명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